

#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3】

2012. 3. 5.

## 시리아 사태의 동향과 전망

### 목 차

I. 국가 개관 .....	1
II. 시위 사태의 경과 .....	3
III. 시위의 발생 원인 .....	6
IV. 시리아 사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	7
V. 전망 .....	9



■ 2010년 말 시작된 중동 민주화 시위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정권교체라는 성과를 거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이 계속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리아 사태의 경과와 발생 원인, 전망을 정리하고자 함.

## I. 국가 개관



### □ 개황

- 시리아는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에 위치하여 터키,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과 접경하고 있음.
- 면적 185,000 km<sup>2</sup>(남한의 1.9배), 인구 2,290만 명(2010년 말 기준)으로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수니파 72%,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 12% 등)임.
- 농업이 경제의 주축이며 주요 외화획득원은 해외 근로자(약 1,500만 명)의 송금과 석유 수출수입임(산유량 일 35만 배럴). 1인당 GDP는 4,600달러(2011년)로 추정됨.



## □ 정치체제

- 사회주의 국가로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음.
  - 1970년 무혈쿠데타로 집권한 하페즈 알아사드(Hafiz al-Assad) 대통령이 사망하자 2000년에 아들인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당시 34세)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집권 중임.
  - 바샤르 알아사드는 취임 직후에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등 소위 '다마스쿠스의 봄' 시대를 열었음
  - 그러나 이듬해인 2001년부터 자신을 반대하는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를 체포하고, 비밀경찰과 비상사태법을 기본으로 하는 철권정치를 시작하였음.
  - \* 1963년에 제정된 동법에 따르면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정부는 법관의 영장 없이 보안사범 구속, 통신매체 감청, 언론매체 통제가 가능함.
  - 2007년 대선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97.7% 찬성률로 재선되었음.
- 헌법에 따라 1971년부터 바트(Baath)당의 1당체제를 고수하고 있음.

## □ 대외관계

- 시리아는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중동 최대의 테러조직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은 2003년부터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여 경제제재를 시행하여 왔음.
- 2005년에 발생한 레바논의 하리리 총리 암살사건에 시리아 정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시리아는 29년 동안 레바논에서 주둔하였던 자국 군대를 철수하였음
- 오랜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2007년에 프랑스와의 외교채널을 복원하였고,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평화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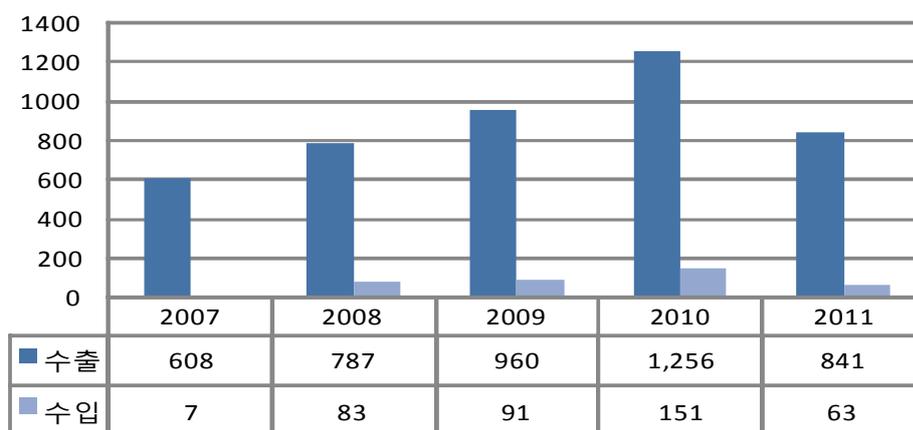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시리아는 중동 국가들 중 우리의 유일한 미수교국(북한과 1966년 수교)이나, 현재 2개 기업이 진출해 있고 100여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음
  - 시위와 유혈진압이 계속됨에 따라 2011년에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의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됨.
- 양국간 교역규모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2007년 이후 증가해 왔으나 2011년에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림 1> 한국의 대 시리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OTIS, 2011

## II. 시위사태의 경과

### □ 2011년 1월 청년의 분신자살로 평화시위 시작

- 튀니지에서 젊은 노점상이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는 분신 자살을 시도하여 민주 혁명을 촉발시킨 것과 같이, 시리아에서도 2011년 1월에 하산 알리아클레(Hasan Ali Akleh)의 분신자살로 시위가 시작되었음.



-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었던 여타 중동 국가들과는 달리 시리아 시위는 초기에 서서히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음.
- 그러나 공공집회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정부는 소규모 평화시위에 대해서도 강경 진압하였으며, 특히 2011년 3월에는 반정부 내용이 담긴 낙서를 한 어린이들을 체포하며 시민들의 반발이 커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음.

#### □ 정부는 시위대에게 유화책과 강경책을 병용

- 정부는 2011년 4월에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무려 48년 동안 국민을 탄압하는 데 악용된 비상사태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치범을 석방하고 공무원 임금을 20~30% 인상하는 등 유화조치를 취하였음.
- 그러나 시위자들의 장례 행렬을 기습공격하는 등 강경책도 병행함
- 정부는 무장집단이 외국의 지원을 받아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대와 탱크, 전투기를 동원하여 무차별 유혈진압을 지속하고 있음.
- 4월 22일에는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인 72명이 사망하였고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 기간(8월 1~29일) 중에도 관례를 깨고 시위대를 무력진압하였음.

#### □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더욱 악화

- 계속되는 시위대 유혈진압에 대하여 EU, 미국에 이어 터키와 중동국가들까지 제재조치에 동참하며 시리아 정권을 압박하고는 있으나,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2년에 들어서도 2월 3~4일에 홈스시(市)를 폭격하여 3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이 점차 학살로 변모하고 있으며 UN은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7,5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홈스는 반정부 시위가 최초로 발생한, 시리아 민주화의 구심점임



<표 1> 시리아 시위사태의 주요 경과

일 자	주요 내용
2011년 1월	- 하산 아클레의 분신자살과 주변국 민주화 시위 등의 영향을 받아 소규모 평화시위 시작
3월	- 어린이 체포 등 정부의 강경진압에 대한 반발로 시위 확산 - 시위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
4월	- 정부는 비상사태법 폐지, 정치범 석방 등 유화책과 탱크를 동원한 시위대 유혈 진압 등 강경책 병행
5월	- 미국, 캐나다, EU의 시리아 제재 시작
7월	- 역대 최대 규모(45만 명)의 대통령 퇴진 시위(하마市) 발발 - 친정부 시위대의 미국, 프랑스 대사관 공격
9월	- EU, 대 시리아 제재조치 강화 (시리아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의 구매, 운송 및 이와 관련된 금융, 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
10월	- UN 안보리, 시리아 제재 결의안 부결 (러시아, 중국이 거부권 행사)
11월	- 아랍연맹, 시리아의 회원 자격 박탈 및 경제제재 조치
12월	- 시리아군 합동군사훈련 실시 및 시위가담자 탄압을 위한 법령 제정 - 아랍연맹에서 감시단 파견
2012년 1월	- 러시아, 시리아 정부 지지 선언 및 항공모함 파견
2월	- 서방국, 시리아 대사관 철수 및 추가 제재 (아랍국가들도 시리아 대사 추방) - UN 안보리, 알아사드 대통령 퇴진 결의안 부결 -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 III. 시위의 발생원인

#### □ 높은 물가상승률과 청년실업률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 농업이 경제의 주축이나 관개시설 미비로 기후여건 변화에 따라 생산량의 기복이 크고 생산성이 낮아 정부의 보조금에 주로 의존해 왔음. 만성적 재정적자로 보조금이 축소되며 소비자물가상승세가 지속되었음.
- 1인당 GDP는 4,600달러에 불과하여 중동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2010년 8.5%로 특히 15~24세 청년실업률이 22.4%를 기록하였음.

#### □ 41년간 2대에 걸친 독재정권으로 인한 불만 누적

-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사태법, 비밀경찰제도로 국민을 감시, 탄압하고, 알아사드 가문이 군수·민간 산업의 요직을 차지하여 부정 부패가 누적됨.
-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에서 시리아는 180개국 중 126위임.

#### □ 소수인 시아파의 집권에 따른 갈등

- 알아사드 대통령이 속한 알라위파(Alawit)는 이슬람교 시아파 중에서도 소수파에 속하며, 시리아 인구의 12%에 불과하나 집권중추세력임.

<표 2> 이슬람교의 수니파와 시아파 비교

구분	수니파(Sunnis)	시아파(Shiis)
기원	무함마드 사후에 친구이자 제1칼리파(후계자) 아부 바크르 추종자의 모임	무함마드 사후에 사위이자 제5칼리파인 알리 추종자의 모임
특징	코란 자체의 해석, 하디스(마호메트의 언행록) 및 예언자 등의 선례를 추종	이맘(종교 지도자)의 코란 해석을 신봉하며 점성술과 연금술 등이 혼재되어 신비주의 색채
신자의 의무	5대 의무: 유일신 고백, 예배, 헌금, 라마단 중 금식, 성지순례	5대 의무에 지하드(성전), 선행이 추가되어 과격하다는 인상 내포
주요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바레인, 레바논, 팔레스타인



## IV. 시리아 사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 □ 국가별 입장 차이로 군사적 개입 등 합의 도출에 어려움

- 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11년 10월과 2012년 2월에 시리아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려 하였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으며, 2012년 2월 17일에 총회에서 유혈사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sup>1)</sup>
  -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알아사드 대통령이 인권 탄압과 민간인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 총회 결의안은 물론 2월에 채택하려 했던 안보리 결의안에도 경제 제재, 무기반입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군사적 개입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
- EU : 시위대 유혈진압에 따른 인권 탄압과 학살에 우려를 표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함
  - EU는 시리아 원유수출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TOTAL(프랑스), Royal Dutch Shell(네덜란드, 영국)이 시리아산 원유의 생산, 수출에 참여하고 있음.
- 미국 : 외교적 개입만을 주장하여 왔으나, 시위대 유혈진압으로 사상자 수가 급증하자 점차 반군에 대한 무장지원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아랍연맹<sup>2)</sup>: 시위 사태를 방관하는 것에 대한 서방의 비난이 거세지자 최근 제재조치와 감시단 파견등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sup>3)</sup>
  - 2011년 11월 시리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전방위 제재조치를 시작하였음. 12월 말부터 유혈진압 방지를 위한 감시단을 파견하였으나 감시단 자체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자 곧 철수하고 UN에 추가제재조치를 요구함.

1)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법으로 인정되어 모든 회원국이 수용할 의무가 있으나, 총회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고 국제적 행동을 촉구한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음.

2) 아랍연맹(Arab league)은 1948년 설립된 지역기구로서 이 지역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현재 회원국은 22개국이며 이집트가 주도하고 있음.

3) 아랍연맹 감시단의 실제 활동은 시리아가 제공한 차량에 탑승하여 에스코트를 받는 데 그쳤음



- 터키 : 전통적으로 중동국가들 간의 교량 역할을 해 온 터키는 시리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시위사태로 인한 경제제재조치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음.
  - 2011년에 12월 터키가 시리아에 경제제재조치를 취하자 시리아는 이에 반발하여 2007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며, 터키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으로 터키 제품의 시리아 진출을 봉쇄하였음.
- 러시아 : 2차레의 UN 안보리 시리아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2월 초에 서방국가들이 시리아 대사를 모두 소환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무장관을 파견하는 등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임.
  - 러시아는 2005년에 100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해 주었을 뿐 아니라 시리아에 매년 50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 타르투스에 유일한 해외 해군기지를 확보<sup>4)</sup>하고 있는 우방국임.
  - 2012년 1월에 러시아가 시리아 근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하자 서방사회는 시리아를 지지하는 무력시위로 해석하기도 하였음.
- 중국 : 시리아 인민의 자주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시리아 사태에 대한 외부 세력들의 무력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표 3 > 주요 중동국가 사태에 대한 중국·러시아와 서방의 입장 비교**

구분	서방	중국·러시아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금수조치 및 반정부 세력 지원방안 모색	시리아에 무기 공급 계속, 서방의 시리아 간섭은 비합법적이라고 주장
이란	핵무기 개발을 우려, 금수조치 등 제재 지속	제재 아닌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
이라크	미군의 완전 철군으로 영향력 약화	러시아는 이라크 채무탕감 및 경제협력 강화, 중국은 대 이라크 수출 증가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대한 군사공격	서방의 리비아 공격 비난

4) 러시아는 하페즈 알아사드(Hafiz al-Assad) 전임 대통령 시절인 1970년대에 부동항(不凍港)을 확보하기 위해 타르투스항 입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군 기지 현대화에도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V. 전망

### □ 단기간에 근본적 정권 교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시리아 정권은 시위대에 대해 강력한 무력진압을 지속하고 있음.
  -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약 7,500명에 이르며, 국제 사회는 알아사드가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대규모 학살사태를 일으킬 가능성<sup>5)</sup>을 우려하고 있음.
- 석유산업 중심의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한계
  - 석유는 총 수출의 약 25%, 재정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석유수입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EU의 수입금지조치로 인한 석유수출의 차질은 중국, 인도 등으로 수출대상국을 전환할 수도 있음.
-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으로 정권기반 강화에 주력 중
  - 시리아 내에서는 군대 등 무장세력의 대부분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알아사드를 지지하고 있고, 2월 26일에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에서도 89.4%의 찬성표를 획득하였음.
  - 개헌안은 복수정당제 도입, 대통령의 연임 제한(2회)을 통해 민주화를 표방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 7년인 대통령의 연임 제한은 차기 선거(2014년 예정)부터 적용되므로 알아사드 대통령은 사실상 2028년까지 집권할 수 있음.
  - 아울러 종교나 민족에 기반을 둔 정당의 설립을 금지하고, 피선거권자를 시리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시리아인이 배우자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무슬림형제단이나 쿠르드족 등 야권 세력의 출현을 차단하려 하고 있음.

5) 전임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은 1982년 2월에 정부에 반대하며 테러를 가했던 수니파 무슬림형제단을 진압하기 위하여 본거지인 하마(Hama)를 전투기, 탱크,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공격하여 사망자가 17,000~40,000명에 달하였음.



## □ 국제적 군사 개입은 용이하지 않을 전망

### ○ 군사개입에 대한 부담

- 시리아는 32만여 명의 정규군과 20만 명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보유량\*이 세계 1위인 중동의 군사강국임.

\* 시리아는 1967년 이스라엘과의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화학무기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 발효된 화학무기금지조약(화학무기의 생산·보유 금지)에 서명하지 않은 6개국 중 하나임.

- 시리아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경우에 우방인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자극하여 대규모 중동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 ○ 국제사회의 합의 결렬

- 시리아 개입에 관한 UN 안보리의 결의안이 이미 2차례 부결되었고, 2월 12일에 아랍연맹이 요청한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해서도 미국, 터키, 러시아가 반대하였음<sup>6)</sup>

- 2012년 2월 24일에 열린 ‘시리아의 친구들’<sup>7)</sup> 회의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되었으나 군사 개입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함.

### ○ 중동, 서방 각국이 사실상 시리아의 근본적 변화를 희망하지 않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 정권교체 시에 알카에다가 주력으로 부상하여 사우디 타도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최근 안정세를 유지해 온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을 자극하기를 원치 않음.

-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동맹국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해 온 알아사드 정권 붕괴로 시리아 국민의 대다수인 수니파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리비아의 경우에는 아랍연맹이 제안한 UN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러시아와 중국은 기권), 이를 근거로 서방제국이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무력으로 개입한 바 있음.

7) 2011년 9월 결성되어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였던 ‘리비아의 친구들’과 같이 시리아 반정부세력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국제적 연대임. 2011년 12월 아랍연맹이 제안하였으며, 이들 국가와 미국이 주축이 되었음.



- 중국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상태에서 원유 등 자원 확보의 차질이나 투자시설의 피해를 우려함.
- 리비아와 달리 석유 매장량이 적어(25억 배럴로 460억 배럴인 리비아의 5% 수준) 군사개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기 어려움.
- 각국은 시리아의 정세 불안이 주변 산유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핵개발 의혹으로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된 이란 등을 자극하여 국제 원유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큰 점을 우려하고 있음.

#### □ 중동 지역 내 이슬람교 종파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

- 최근 시리아 내에서는 정부와 시위대 뿐 아니라,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음.
  - 알사드르는 종파 간 내전구도를 구성하여 서방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민병대가 수니파를 집중 공격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 레바논에서 친시리아 세력인 알라위파와 수니파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함.
  - 2월 11일 트리폴리에서 발생한 충돌로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함.
- 시리아-이라크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수니파들이 시리아 사태의 추이에 따라 이라크 내 분리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이라크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시아파로, 수니파의 후세인이 축출된 후 시아파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미군 철수 이후 종파 간 충돌이 빈번함.

작성: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조사역 유나영(02-3779-5724)  
smilenayoung@koreaexim.go.kr